

## 한·미정상의 해법: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병행

### 박 종 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자리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북한의 개성경제사무소 정부인원 추방, 미사일 발사, 대통령 개인 비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의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사안은 북핵문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병행·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면서 남북대화는 단절하는 통미봉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한·미정상의 첫 번째 대북 메시지는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 한·미FTA의 포괄적 맥락위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21세기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북핵문제, 북한의 장래,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21세기의 국제적 경향,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 안보와 경제의 연계 등을 직시하면서 생존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미정상의 두 번째 대북 메시지는 비핵화의 진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미정상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함으로써 4개월 동안 지연되었던 북핵신고 문제를 일단락하고 향후 검증과 6자회담의 후속 협상에 무게를 두었다. 물론 향후 검증이 중요하며, 검증이 불충분할 경우 관계진전이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이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비핵화의 진전에 대한 인정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비핵화의 진전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의 대북 유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북한도 최근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를 군부가 면담하여, 비핵화의 이행에 대해서 북한 군부도 동의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한·미정상의 긍정적 입장을 유도하였다.

또한 비핵화의 진전이 인정됨으로써 비핵화를 남북관계 진전의 조건으로 설정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의 전제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미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6자회담에서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기까지 중국의 중재자역할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후 ‘2·13 합의’, ‘10·3합의’ 등 고비마다 북·미협상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최근 싱가포르 잠정합의에서도 북·미협상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미정상이 6자회담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신고, 검증과 3단계 협상에서 다른 참여국들의 역할분담과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6자회담이 강조된 것은 향후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틀과 병행하여 진전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한·미가 6자회담 합의의 틀에 입각하여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정상외의 세 번째 대북 메시지는 한·미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 관계 진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과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을 지지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과시하였다. 이것은 북한에게 통미봉남이 불가능하며 남북대화없이 미·북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통남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대화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수긍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와 직접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은 비핵화의 진전 및 미·북 관계 진전과 병행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의 표명이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남북대화가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남북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화된 남북대화의 틀에 입각하여 모든 분야의 남북관계를 균형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은 지난 10년간 기능적 필요에 의해 비제도화된 형태로 대화틀을 유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제도화된 틀에 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정상외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북한은 비핵화의 단계적 진전을 대미 협상의 승리로 평가하고 대미관계 개선에 치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통미봉남정책을 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초 통미봉남이 적용되던 것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선 1차 북핵위기는 북·미협상이 대화틀이었으며 한국은 핵협상과정에서 제외된 반면, 현재는 한국이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적 대북정책과 김영삼정부의 압박정책이 달랐던 반면, 현재 한·미가 대북정책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이 증가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 대북 레버리지가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와 비교해서 북한의 대내외상황은 악화된 반면, 한국의 국제적 입지와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통미봉남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통미통남에 호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남북간 공식·비공식의 고위급접촉과 특사회담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하드웨어와 함께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핵·개방·3000’을 구체화하여 북한에게 실익을 설명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찾아질 수 있다.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을 고려할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렛대이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위에서 ‘6·15공동선언’과 ‘10·4합의’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만 기존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바탕위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를 수용하여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변화된 대내외 환경, 경제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입각하여 기존 합의사항의 선별적 실행계획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이제 공은 다시 북한에게 넘어갔다. 북한은 한·미공조의 현실위에서 비핵화와 미·북관계,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체제생존과 발전의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한·미균열과 남북문제의 정치화를 시도하다가 고립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